

한국교육행정학회 소식지

THE NEWSLETTER

발행처 한국교육행정학회 (www.keas.or.kr) / 발행인 고전 / 편집인 홍창남 / 편집팀 이호준, 장우천, 김용준 / E-mail keas1967@daum.net
주소 (0415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 9층 902호(도화동, 마스터즈타워빌딩)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 사무국

학회의 활동사항 및 학술대회 개최, 학회관련 업무는 홈페이지(www.keas.or.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론 |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에 대한 소고

이 광 현 | 부산교육대학교 / 교육학과 교수

○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의 시작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들어서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80년대까지 한국은 국가 주도형 교원양성체제가 지속된 시기이다. 80년대까지 교원양성체제에 대한 주요한 변화의 시기는 교육대학교가 과거 해방 이후 고등학교 수준인 사범학교에서 전문대 수준으로 승격된 61년도, 그리고 4년제로 전환된 81년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80년대까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중등교원은 국립 사범대학에서 그리고 초등교원은 국립교육대학에서 교원을 양성하여 소위 내신 성적(학부학점)을 기준으로 국립사범대와 교대가 위치한 지역의 교육청 소속의 교원으로 발령을 하는 의무발령제 시스템을 유지하였다.

부산교대의 경우 의무발령제 시기에 부산지역에 학부 학점 순으로 배정하면서 더 이상 부산지역에 교원을 배정하기 어려울 경우, 즉 부산에 교원 충원이 불가능할 경우 학점이 낮은 졸업생의 경우 울산이나 경기도로 배치받는 경우도 많이 존재했다. 이러한 정부의 공립학교 교원 의무발령제 체제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시장경제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는 매우 보기드문 국가사회주의적인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사회주의(혹은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이 일종의 의무발령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북한조차도 교원이 부족한 학교들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의 교육신문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온 적이 있다고 한다. “사범대학, 교원대학 졸업생들을 교원이 부족한 학교들에 무조건 배치하는 엄격한 규율을 세운다.” 교원이 부족한 학교는 농어촌 학교들일 것인데 이러한 교원이 부족한 학교에 북한의 예비교원들이 배정받기를 원하지 않아서 의무강제배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북한의 경우 남성들은 교원을

1) 공공재적 성격이 가장 강한 국방부에서는 육군사관학교 등 소수의 군간부에 한하여 의무발령제와 같은 양성 및 임용 체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국가에서 존재한다. 그러나 대규모 인원의 일반 초중등교원을 국가가 의무발령제 체제를 유지하는 경우는 북한 같은 구 사회주의국가 외에 현대 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에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거쳐서 당, 정권기관, 청년동맹 등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선호하며 평교원으로 일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한다(엄현숙, 2018).

해방 이후 80년대까지 대규모의 일반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발령제 체제는 초중등 국공립학교의 교육을 정부가 관료적으로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와 맞물려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무발령제는 80년대 후반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폐지가 되었다. 교육공무원이 되려는 자를 출신학교 및 설립, 학과에 따라 차별하는 국공립사범대 우선 채용권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으로 판결이 난 것이다. 교원임용이 이러한 개방적 체제로 된 것에 대해서는 교육학계에서는 당연한 시대적 흐름으로 여겨야 한다.

○ 5.31교육개혁안의 주요 교원양성체제 의제

90년대 문민정부 수립 이후 기존의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의 교육개혁안이라고 볼 수 있는 5.31 교육개혁안에서 교원 양성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31 교육개혁안에서는 교원양성기관의 평가인증제 도입을 통한 교원양성교육의 질관리, 그리고 교원수급 조절 문제가 제기되었다. 중등교원의 경우 과목별 수급격차 문제가 주요하게 제기되면서 수요가 증가하는 과목은 일반 대학에 교직과정을 허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과 관련하여 영세성의 문제, 유아교육과 중등교육과의 연계성의 문제,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한 초중고 통합운영학교의 증가 등으로 초중등교원의 통합적 양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교육대학을 종합대학과 통합하거나 지역별 교육대학 통합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과 같이 교원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이 제시되고 있다(교육개혁위원회, 1996).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IMF 금융위기와 교원정년단축으로 명예퇴직 교원 수 증가 등으로 교원수급 문제가 발생하였다. 상대적으로 중등교원의 경우 기존에 개방형으로 많은 수의 예비교원이 양성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았으나 초등의 경우 공급이 제한되고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교원부족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음악, 미술, 체육, 영어 과목 위주로 약 3,500여명의 교과전담교사를 선발하여 단기 보수교육을 시킨 후 초등교원으로 임용하였다(강원근, 2000). 초등의 경우 양성은 목적형처럼 통제되고 있으나 채용은 개방형이라는 이중 구조로 인해서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 되고 있다. 중등의 경우는 과목별 수급 조정의 문제와 더불어 기본적으로 인원의 과잉양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교육대학과 거점국립대학간의 통합은 참여정부 마지막 시기인 2006-2007년 시기에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통합논의가 이루어져서 2007년도 하반기에 양 대학이 통합에 합의하면서 최초로 거점국립대학과 교육대학 통합 사례가 발생하였다.

○ 교원양성기관평가를 통한 수급조절 추진

이러한 상황에서 1998년도 이후 시행되어온 교원양성기관 평가가 2009년도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는 교원수급조정관리를 위한 평가기제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를 ABCDE로 구분하여, A는 우수양성기관으로 인정(교육부 표창 등), B는 기본적인 양성기관으로서 유지, C를 받을 경우 20% 교원양성 정원 감축, D를 받을 경우 50%감축, E등급은 폐지 등으로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이러한 평가기조는 현재까지 이어져 오

고 있다.

교대의 경우 2010년도에 수행된 평가결과에서 공주교대 A, 경인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서울교대, 진주교대는 B, 그리고 부산교대, 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는 C 등급을 받아서 부산, 전주, 청주, 춘천교대만 20% 정원 감축 대상이 되었다(교육부, 2010). 그러나 교육대학교는 전체 초등교원양성의 수요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A와 B등급을 받은 교육대학교 까지 모두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균등하게 정원을 2013년도까지 축소하였다. 중등교사의 경우도 2010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교원양성기관평가결과에 의해서 양성규모가 감축되었다. 2010년도 43,227명에서 2019년도에는 22,282명까지 양성인원이 감축되었다(교육부 2020년 내부자료). 따라서 현재와 같은 중등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조만간 중등교원양성의 과잉공급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다양한 교과목의 경우 관련 전공에 대해서 교직이수의 문을 일정정도 열어둘 필요는 있을 것이다.

○ 교육대학과 거점국립대학 간의 통합

5.31 교육개혁안에서 제기된 교원양성체제 방안에서 2000년대 이후 인증평가, 즉 현실에서는 교원양성기관평가를 통한 질관리 혹은 수급조정이 어느 정도 추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중등교원의 양성인원이 거의 절반 가까이 감축되었으며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도 정원감축이 이루어져서 적정 인원의 초등교원 공급이 이루어지는 등 일정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교육대학 통합 논의나 교원전문대학원 체제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하였다.

교육대학 통합의 경우 제주대-제주교대 사례가 유일하다. 제주대-제주교대 통합이후 2011년도와, 16년도에 경인교대와 서울대(서울사대)와의 통합논의가 진행된 바가 있으며 공주교대와 충남대, 공주대 간의 통합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산교대와 부산대의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학령인구 수 감소는 전반적인 한국 대학의 구조조정과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교육대학과 거점국립대학간의 통합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6학년도부터는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30만명 이하로 감소될 것이 확실시 된다. 그에 따라 향후 5년 후에는 초등교원양성체제를 현재와 같은 소규모의 단과대와 같은 분리형 양성체제로 유지하기 위한 근거는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초등교사만 별도의 대학에서 양성하는 체제는 과거 산업사회 초반 해당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시기에 단과대학 체제로 급하게 인력(초등교사)을 양성하는 모델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이러한 산업사회 초기의 대학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전문단과대학인 교원대학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교사를 양성하며(유치원 교사는 2년제, 초등교사는 3년제 양성과정), 사범대학(4년제)에서는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분리된 단과대학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임병숙 외, 2010).

우리가 벤치마킹하고자 많이 인용하는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경우, 종합대학 내의 교육대학에서 유아교사, 초등교사, 중등교사, 보건교사, 특수교사, 영양교사 등을 종합적으로 양성한다. 이렇게 함께 교육분야의 인재를 양성해야 초등과 중등 교사간의 상호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보건교사나 특수교사가 될 학생들 역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유아교육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이러한 종합적 교원양성체제는 교육현장에서의 교원들 간의 협력을 더욱 원활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한국처럼 단과대학으로 교육대학이 분리된 경우는 산업사회 초기의 대학모형으로 볼 수 있으며 초등과 중등 교원 간의 상호 이해를 어렵게 하고 학교급 간의 문화적 벽을 더욱 높게 만들게 된다. 교육대학과 거점국립대

학의 통합을 통해서 종합적인 유초중등 교원양성체제를 구축해야 교육현장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더욱 성과있는 교원양성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교원전문대학원의 비현실성

교육전문대학원 논의는 교원양성체제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다. 작년 2020년 국가교육회의 차원에서 시행된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 공론화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중장기 과제로 미루어두었다. 교원전문대학원의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되는 해외사례는 정확한 인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확하게 보면 총 6년 과정으로 목적형의 석사수준으로 교원을 양성하는 국가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핀란드의 헬싱키대학 경우는 유치원 교사는 학부 3년 과정으로 양성하고 있다. 그리고 초등이나 중등교사는 3년 학부과정 이후 2년의 석사과정을 이수해서 총 5년의 교육연한의 학업을 통해서 교직으로 진출한다. 그러나 이러한 3+2의 고등교육과정은 핀란드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즉, 특별히 예비교원에게만 석사학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단과대학 학생들도 대부분 대학을 다니게 되면 석사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보편적이다(김병찬, 2017). 게다가 핀란드는 초중등교원이 3+2년을 다닌다고 해도 반드시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임용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른 분야로 진출해야 하는데 3+2년 동안 대부분 복수전공을 이수하여 개방적으로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즉 목적형 체제가 아니라 개방형체제의 석사수준의 양성인 것인데 앞서 말한 것처럼 핀란드의 대학은 교육대학만 아니라 여타 단과대학이 대부분 3+2년의 인력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석사수준으로 교원을 양성하는 사례로 간혹 언급이 된다. 프랑스의 경우 얼핏 보면 석사수준으로 양성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실제로는 석사과정 1년 차에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곧장 현장에 발령되고 인턴십을 수행하게 되는 5년제 개방형 양성체제 모형이다. 물론 석사학위가 주어지나 실제 교육과정은 석사 1년을 추가하는 셈이며 현장 1년 인턴십을 교육과정처럼 인정해주는 실용적인 학위로 볼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는 나머지 석사과정 1년을 대학에서 여러 수업을 수강한 후에, 즉 2년의 학문적 학위과정을 이수한 후에 다른 분야로 진출하게 하는 개방형 석사과정 체제로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목적형 성격을 갖는 교원전문대학원과는 다른 모델이다. 즉, 유럽의 경우도 5년의 교원양성과정이 존재하나 잘 알고 보면 3-4년은 여러 분야를 공부하고 추가로 교과교육 등을 1년 더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현재 논의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의과대학처럼 공급을 통제하는 모델이 아닌 개방형 석사양성체제로서 교육연한도 5년으로 1년 더 짧은 상황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이화도, 2017; 이광현, 2021).

미국의 경우 초중등교과교육학을 이끌고 있는 미시간 주립대학이 간혹 석사학위 수준으로 교원을 양성한다는 ‘오해’가 있다. 과거 미래의 학교(Tomorrow’s School) 운동에서 미시간 주립대학을 중심으로 의과대학 방식의 석사수준 교사 교육과정 도입이 논의된 바 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Labaree, 2004). 현재 미시간 주립대학은 교육대학 학생이 초중등 교원으로 임용되고 난 후 혹은 현장에서 대학 5년차에 인턴십을 하면서 교수와 주기적으로 세미나를 하는 1년(5년차) 추가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이는 학생이 원하는 경우 선택하는 과정이지 필수는 아니다(미시간 주립대 교육학과 홈페이지 참조). 그리고 면밀하게 말해서 1년 더 현장근무와 병행해서 세미나/수업을 한다고 해서 석사학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의 교육계에서 이상적으로 원하는 '목적형' 교원전문대학원 체제는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필자가 보기에는 목적형 교원전문대학원을 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의과대학처럼 높은 임금수익률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과연 교직에 필요한 교육연한이 6년(혹은 7년)이나 되어야 하는지 즉, 교육학의 학문적 깊이와 양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Labaree(2004)의 지적처럼 끊임없는 논란(혹은 부정적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거창한 체제논의에 앞서 향후 교사교육 연구자가 더욱 우수한 (교과)교육학을 연구하고 현장의 교수법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학계와 학교 현장과의 연계가 강화될 때 점진적으로 교육 현장이 더 개선될 수가 있을 것이며 이것이 교원양성체제의 소모적 논쟁(목적형 교원전문대학원 논쟁)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가 싶다.

참고문헌

- 강원근(2000). 교육대학교 3학년 편입학생의 실태와 문제분석. *초등교육연구*, 14(1), 199-213.
- 교육부(2010). 2010년 교원양성기관 교육대학교 평가결과 보도자료.
- 교육부(2020). 교원양성정원 현황 내부자료.
- 교육개혁위원회(1996).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III). 참고설명자료. 1996년 8월 20일 4차 대통령 보고서.
- 김병찬(2017). 왜 핀란드 교육인가. 박영스토리.
- 엄현숙(2018). 북한의 12년제 의무교육 실시와 무자격 교원 문제. *한국교육문제연구*, 36(3), 177-196.
- 이광현(2021). 한국 초등교육양성체제의 교육사회학적 진단과 발전방향 논의. 한국교육사회학회 2021년도 학술대회 발표자료.
- 이화도(2017). 프랑스 교원양성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ESPE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27(3), 161-184.
- 임병숙, 조호제, 남궁정(2010). 2000년 이후 북한 교원양성에 관한 연구. *열린교육연구*, 18(2), 241-260.
- Labaree(2004). *The Trouble with Ed Schools*. 유성상, 김민조, 정바울, 이정민(2020) 번역. *교사교육의 딜레마*. 박영스토리.



| 시론 |

학부 5년제 모델을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 혁 규 | 청주교육대학교 / 총장

나는 2020년 국가교육회의 속의 과정에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책임 있게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사교육과 교원양성체제 관련 자료들을 찾아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아주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나, 지금도 그 공부는 계속하고 있다.

국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나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이라는 실용적인 목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가 별로 축적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특히,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외국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싱가포르 국립교육원(NIE)의 교사 양성 프로그램이나 싱가포르 교원 경력 사다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핀란드 예비교사의 실습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교사훈련학교teacher training school 및 별도 자격을 획득해야 근무할 수 있는 그 학교 교사의 연수 프로그램 내용 등이 그런 예이다. 또, 미국의 국립교육경제센터(National Center on Education and Economy, NCEE)가 교장과 교육계 리더들을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1,200만 달러 - 환율에 따라 130~150억 원 정도에 해당 - 를 들여서 개발한 것도 처음 알게 되었다. 공교육 체제의 근대적 유사성을 고려할 때 이를 혁신하려는 외국의 우수 사례를 깊이 비교 연구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더 큰 문제는 한국에서 이루어진 내실 있는 연구의 정책 제안들도 정책 결정 과정에 잘 참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독자들이 많이 공감하실 듯하여 구체적인 예까지는 언급하지는 않겠다. 양성체제 개편 논의의 민주적 절차에 못지않게 객관적 데이터와 연구에 기반한 결정도 아주 중요함을 환기(喚起)하고자 한다.

○ 대학원 수준의 교사 양성, 교사 양성체제 개편 담론의 한 흐름

2020년에 국가교육회의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를 앞두고 한국교육학회 주관으로 교원양성체제 개편 관련 학술대회가 있었다. 온라인으로 열린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해서 들었다. 내가 발견한 것은 공통성이었을까? 아니면 다양한 의견이었을까? 후자에 가깝다. 그렇다면 그것은 공유된 전문성을 기반으로 더 나은 표준을 향해가는 논쟁이었을까? 아니면 개개 학자의 주관적 의견과 사적 이익이 투영된 파편화된 다양성이었을까?

교사 교육의 양태는 나라마다 참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이 분야의 학문적 논의와 혁신 사례를 살펴보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관한 합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핀란드, 싱가포르 등은 여러 문헌에서 교사 교육을 잘 하는 나라로 소개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이나 일본이 교사 교육을 잘하고 있다는 문헌은 발견하기 어렵다. 이런 국제적 동향은 여러 자료를 참고하면 얻을 수 있다. 한 가지 손쉬운 방법은 교사 교육에 대한 최근 핸드북을 살펴보는 것이다.

관련 분야 학자들이 모여서 주기적으로 핸드북을 발행하고 개정하는 것은 영미권의 좋은 학풍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사교육체제 개편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지만, 일정한 담론의 흐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학원 석사 수준 교사 양성 담론이 그것이다. 1990년대 말부터 이런 주장이 시작되었다. 대체로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법학, 의학 분야에 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발표에 영향받은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연구로는 이돈희 외(1998), 황규호(1999), 김갑성 외(2009), 김정원 외(2012), 박영숙 외(2017), 김병찬 외(2018, 2019) 등이 있다. 중요한 초기 연구는 황규호의 연구이다. 황규호는 6년제 모형, 2+4모형, 4+2모형, 복합 모형 등을 검토한 후에 6년제 또는 2+4모형이 더 낫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황규호가 제안한 모형들에 대한 검토가 다양하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연구로 김병찬 외(2018, 2019)는 2년 동안 총 60학점을 이수하는 4+2 체제의 교육전문대학원안을 제안하였다.

대학원 수준의 교사양성체제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교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 ‘4년 학부교육으로는 부족하다’,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입문하도록 교사를 뽑아야 한다’ 등의 이유를 내세운다. 이러한 주장에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고 학자들의 진정성도 묻어 있다.

그러나 나는 꼭 대학원 수준의 교사 양성이어야 하는지에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소위’ 사회적 직위가 높은 전문직 중 석사 학위를 진입 자격 조건으로 요구하는 예는 법전문 이후의 법조인이 거의 유일하다. 또, 교육 연한을 늘리면 전문성은 높아지지만, 그에 수반되는 비용 증가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임용의 확실한 보장이 없이는 석사 수준 양성은 교육의 실효성도 확보하기 어렵다.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정책 수단이 왜 대학원인지가 궁금하다. 미국 유학 출신 교육학자 중에는 개방형 석사 과정이 많은 미국형 모델에 영향을 받아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우수한 고등학생들이 학부에서 교원양성 대학을 잘 선택하지 않는다. 석사 수준 교원양성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를 본받을 모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견(短見)이다. 다양한 자원을 유인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한 2+4년제를 6년제로 전환한 약학대학의 사례 또한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 여기에 더하여 전문직의 수학 연한 연장은 학력 인플레이션이 심한 우리 사회에서 지위 경쟁을 위한 과잉 학력 경쟁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다양한 자원의 교직 입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양질의 양성 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2년 석사 과정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견해의 문제점을 좀 더 다루어보자. 일찍이 황규호(1999)는 ‘4년간의 교사양성교육을 2년으로 축소함으로써 오히려 교원 전문성을 낮추게 할 위험이 있다’라고 진단한 바가 있다. 여기에 6개월에서 1년 동안 현장 교육실습을 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하면 2년 석사 학위 모델은 이런 요구를 다 담아내기에는 너무 협소한 그릇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2년제 석사 과정이 ‘교양 교육과 내용학은 일반 학부에서 소화하고, 석사 과정에서는 교육학, 교과교육학, 교육실습 등을 다루는 분업 구조’를 암묵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분업 구조는 학문과 교과와의 관계에 대한 지난 수십 년의 진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인뿐 아니라 교육학자조차 학문의 단순화가 교과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학문과 교과의 관계에 대한 매우 단편적인 견해이다. 교과에 대한 사유가 발전할수록 교과는 학문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해 간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은 내 전공이 사회교육(일반사회)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회 교과는 단일 학문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다. 사회 현상의 인식과 이해 및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과의 고유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 교과는 이 목적을 위해서 인문학과 사회과학, 때때로 자연과학으로부터 필요한 내용을 취사선택하여 고유한 교과 내용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일반사회)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학, 법학,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철학, 심

리학 분야의 배경지식이 있어야 한다. 자유 전공 학부생이 아니라면 이런 교과목을 어떻게 수강할 수 있을까? 자유 전공 학부생이라도 사회교육(일반사회) 전공이 요구하는 역량을 숙지하지 않으면 어떤 강좌를 어느 정도 이수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문제는 이런 융합적 성격의 교과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과학이나 실과 교과와 같은 전통적 교과도 교과와 대학의 학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용학은 일반대학에서, 교육학과 교과교육학은 교사양성대학에서 배우는 분업 구조가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 학부 5년제 과정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현재의 중등교원 양성체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석사 수준 교사 양성 개혁론자들과 입장이 같다. 초·중·고·대 양성체제도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학부 5년제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두 가지만 언급하겠다. 첫째는 실습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다. 다른 나라들의 실습 기간은 미국이 평균 12~16주, 영국이 24~32주, 독일이 1년, 프랑스 30주(대체로 1년), 핀란드 1년 정도로 알려져 있다. 교육대학교만 놓고 보자면 현재 9~10주 정도의 교육실습을 한다. 이 기간을 더 늘리는 것은 현행 4년제 교육과정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둘째, 현장에서 실행 연구(action research)를 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문제이다. 현행 4년제는 연구역량까지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가 어렵다. 핀란드의 교사 양성 프로그램은 다양한 연구 방법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현장에서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연구 프로그램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정도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학부 5년제를 도입하면서 우리나라 교원양성대학이 직면한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초기 양적 확대에 따른 중등의 과잉 공급 문제와 거의 모든 교수진의 교사 교육자로서의 정체성 부족 문제는 해소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 해결 방안을 함께 검토해 보자. 첫째, 과잉 공급 문제이다. 4년제에서 5년제로 개편하면 1년의 공급 공백이 발생한다. 초등 예비교사는 약 4천 명, 중등 예비교사는 약 2만 명의 순수 감축 효과가 발생한다. 여기에 교육대학교 학교당 총 재학생을 현재와 같은 규모 - 4년제 1,000명을 5년제 1,000명 - 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약 20%의 정원 감축 효과가 추가로 발생한다. 대충 어렵잡아 합계 약 8,000명의 예비 초등교사 감축 효과가 생겨난다. 초등의 경우는 이 정도만도 당분간은 의미 있는 정원 감축 효과이다. 다만, 중등의 경우는 2만 명 감축 정도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추가적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에 의존하듯이 교사 교육의 질은 교사 교육자의 질에 의존한다. 그 핵심에는 교원양성 대학 교수진의 교사 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문제가 있다. 먼저 일정 비율의 실무형 교수진 확보를 법제화한 법전원 모델²⁾처럼 현장 지향적 교수진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다른 예로 싱가포르의 국립교육원(NIE)은 연구 중심 교수진과 교육 중심 교수진(lecturer track)을 구분하고 양자의 역할과 평가 시스템을 달리하고 있다. 이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육 중심형 교수들만 교육에 관심을 가져서는 교원양성 대학 전체 문화를 바꿀 수가 없다. 따라서 법제화를 통해서 현장 실무형 교수진을 확보하는 것과 별개로 교사 교육자의 역할에 대

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 또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교원(이하 이 항에서 “실무경력교원”이라 한다)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실무경력교원은 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등으로 확보할 수 없다.

한 기준(standards)도 제정해야 한다. 참고로 네덜란드는 교사수행기준과 별도로 ‘교사교육자를 위한 수행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교원 양성대학 교수진 전체가 교육에 관심을 두도록 제도를 갖추고 문화도 바꾸어야 한다. 내용 학자라도 자기 에너지의 적어도 10%~20%는 교육에 관한 관심에 할애해야 한다. 왜 그래야 할까? 철학자 들뢰즈와 가타리의 표현을 빌리면, ‘배치’와 ‘계열화’가 바뀌면 의미도 바뀌기 때문이다. ‘사회대학-사회학자-사회학과 학생-사회학 관련 직업 선택’과 ‘교원양성대학교-사회학자-예비교사-교직 진출’이라는 서로 다른 계열화에서 사회학자가 해야 하는 교육과 연구는 같아서는 안 된다. 노마디즘에서 사물의 의미는 본질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하는 항과의 이웃 관계로서 정의되기 때문이다. 교원양성대학 교수진의 정체성을 재구축하는 문제는 교사양성체제 개편의 핵심임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학부 5년제를 주장하면서 왜 석사 학위가 아니고 학사 학위인지도 설명하겠다. 일단 인접 영역과 키 높이를 맞추어야 한다. 건축학과 5년, 약사 6년, 의사 6년 – 물론 의사는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이 이어지기는 한다 – 이다. 전문성 자체의 특성과 생애 전체의 수입 등을 고려할 때 나는 현재로는 5년제 정도가 적합하다고 본다. 석사 학위 과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또 있다. 교원은 발령을 받으면 대개 30년 이상 재직한다. 그동안 꾸준히 연구하고 성장해야 한다. 그런데 시작부터 석사 자격증을 주어서 배출하면 남는 학위 과정은 박사 학위뿐이다. 이는 대학원의 교사 재교육 기능을 고려할 때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나머지 전문성은 현직에서 생애 전체를 통해서 성장해 가는 문화를 만들면 된다. 예비교사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현재의 임용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 생활 경험을 총체적으로 평가에 반영하고, 미국의 edTRA³⁾와 같은 교사역량평가 중심의 임용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 초등교원 양성체제와 중등 교원 양성체제의 통합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초등교원 양성체제와 중등교원 양성체제의 통합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나는 단계적 접근 전략을 제안한다. 우리나라 초등교원 양성체제와 중등교원 양성체제는 출발부터 다른 길을 걸어왔고 다른 고유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먼저 초등은 초등대로, 중등은 중등대로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 집중해야 한다. 학부 5년제 모델을 채택하고 교사 양성대학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만도 상당한 에너지가 들 것이다. 정원 관리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교사 교육자의 정체성도 확립되어야 비로소 논의할 여건이 마련되는 시기이다. 각자의 고유한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통합부터 하려는 것은 음식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도 않고 담을 그릇 걱정부터 하는 꼴이다. 연계 혹은 통합 문제와 관련하여 나는 여러 방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다른 강소대학의 사례를 볼 때 교육대학교 자체 생존도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다. 또, 권역별 통합이나 한국교육종합대학이라는 아이디어도 여전히 검토해 볼 만한 모델이다. 전국의 교원양성대학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한국교육종합대학 방안은 진보 진영에서 오랫동안 주장했던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 모델을 교원양성대학이라는 작은 규모에서 실험해 보는 의미도 지닌다.

종합대학교 내로 통합하는 방안도 여건이 성숙하면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단과 대학 중 하나의 지위로 소속되는 데는 반대한다. 종합대학 내에 단과대학들은 한정된 지분을 두고 경쟁하는 주체들이다. 이 경쟁에서 사범대학을 포

3) <http://www.edtpa.com/Home.aspx>.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발한 이 평가 모델은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벤치마킹을 해야 할 좋은 사례이다.

합한 교원양성기관이 얼마나 열악한 위치에 있는지는 대학 구성원이라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나는 현재의 사범대학과 같은 열악한 위치로 떨어질 위험이 큰 통합에 반대한다. 이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도 별도 법률을 만들어서 보호받고 있다. 외국의 사례로는 교사교육의 모범 사례로 알려진 싱가포르 국립교육원(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NIE)도南洋 공과대학이라는 종합 대학 내에 소속되어 있지만, 자율성을 지닌 독립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더욱 부러운 것은 국립교육원이 국제적 교사교육의 모델이 되겠다는 담대한 비전하에 아세안 국가들의 교사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이다. 초중등교육은 헌법적 가치를 가지며 이를 담당하는 교사를 특별히 잘 교육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만약 통합하려면, 그런 담대한 비전을 설계하고 법전원 이상의 법적 보호를 통해서 재정과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최소 요구조건이다. 그것이 초등뿐 아니라 중등 양성기관에도 유리하다.

나는 법전원 도입 과정을 연구하다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법학계는 기존 제도와 일정 기간 병치(併置)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사법 시험과 변호사 시험을 일정 기간 양립시켰고, 로스쿨과 학부 법학과가 다른 기능을 하면서 여전히 함께 존속하고 있다. 이런 방식을 교원양성체제 개편에도 일정 기간 - 10년~15년 -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일반대학 학부 교직 과정 및 교육대학원 교원양성기능은 폐지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이 방향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문제는 과다 설치되어있는 사립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의 구조조정이다. 법전원 사례를 참조하여 시설, 교수 정원, 장학금 등 엄격한 기준을 법제화⁴⁾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만 5년제 학부 교원양성 기능을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좋은 교사 양성을 위해서 투자할 생각이 없는 사립대학은 자연스럽게 구조 조정될 것이다. 4년제와 5년제 모델을 일정 기간 병치시키면, 기존 교수진과 학생의 기득권과 크게 충돌하지 않으면서 10년 정도면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것으로 전망한다. 자연스럽게 초과 공급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나는 바람직한 목표 양성 규모를 초등의 경우 필요정원의 1.1~1.3배, 중등의 경우 1.3배~1.5배 정도라고 본다. 이러한 정원 조정에 실패하면 한국의 교원양성은 사설 강사에 의존하는 임용 교사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한편, 4년제의 경우 교사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교육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로 남겨둘 수도 있다. 미래사회는 공교육 교사 외에도 다양한 교육 관련 인력이 필요하다. 5년제 모델에서도 필요에 따라 대학 내에 '교사양성과정'과 '다른 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변화가 없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법전원, 의전원, 약대 6년제 개편 등을 살펴보면 얻은 교훈이 있다. 첫째, 제도 개선에 걸리는 시간이다. 정책 의제로 등장해서 실행되기까지 적어도 10년이 넘는 기간이 걸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실의 다양한 변수와 이해 관계자들의 역할 관계를 고려할 때 짧은 기간에 성공하게 정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준다.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차근차근 접근해야 한다. 둘째, 개혁 세력이 개혁 의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법전원의 경우를 보면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으며, 역대 정부의 계속적 지원을 끌어내는지가 제도화의 성공을 좌우한다. 좋은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어도 1년 이상 전문가와 이해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국민적 논의를 제안한다. 외국의 저명 학자들까지 개방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면 더 좋겠다. 이 논의에는 전문성과 민주성이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하고 일정한 합의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 코스닉과 벡, 굿윈(Clare Kosnik, Clive Beck, and Goodwin A. Lin(2016)

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대한 법률』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총정원', '교원 1인당 학생수(교원 1인당 학생수 15인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 운영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및 장학금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 양성대학도 이런 정도의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는 세계의 교원 교육에 대한 개혁 노력을 검토한 후 결론에서 “일관된 방향을 가진 점증적 개혁(Incremental reform in a consistent direction)”을 할 것을 조언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정치권력의 자의적 개입으로 일관성은 고사하고 만신창이 상태이다. 모두의 집단 지성을 모아서 일관된 방향을 설정하고 뚝뚝한 한발 한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

글을 마무리하기 전에 개혁 세력이 싸워야 할 거대한 사회적 통념을 환기(喚起)하고자 한다. 공교육의 교사는 다른 가르치는 직업과 다른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는다. 공교육의 교사는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과 함께 공동체의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지녀야 한다. 교육적 실천에 대한 공교육 교원의 책무성과 상상력은 국가와 세계 공동체를 품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평등, 배려, 사회정의, 공공성 등은 공교육 교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의 실현을 통해 학습자의 자아실현이 전체 공동체의 공익과 조화되는 교육적·사회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교원들은 노력해야 한다. 그런 책무를 잘 감당하는 교사는 그냥 길러지지 않는다. 교원양성체제는 그런 교사를 양성하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

참, 10월 말에 『한국의 교사와 교사되기』라는 책을 출간하다. 소박한 내용이지만 내가 1년 동안 공부한 결과물이다. 이 글도 책에 담겨 있는 정책 제안 중 하나를 요약한 것이다.

참고문헌

- 김갑성 외(2009). 한국교원양성체제 개편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김병찬 외(2018). 교원 양성 및 임용 체제 개편 방안,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정책 보고서.
김병찬 외(2019). 2030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 교육전문대학원 설치를 중심으로. 2019 한국
교원교육학회 제 75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75~118.
김정원 외(2012). 미래형 교사교육체제 구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박영숙 외(2017).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 혁신 과제(I):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이돈희 외(1998). 대학원 수준에 있어서의 교원양성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한국교육학회(2020). 한국교육학회-한국교원대학교 공동주최 2020년 특별포럼 자료집.
황규호(1999). 대학원 수준에서의 교원양성 방안. *교육과학연구*, 30. pp. 33~49,
Placier, P. L., Letseka, M., Seroto, J., Loh, J., Montecions, C., Vasquez, N., & Tirri, K.(2016). The history of initial
teacher preparation in international contexts, Loughran, J. & Hamilton M. L.(eds)(2016). *International handbook
of teacher education*, vol. 1. Springer.
Kosnik, C., Beck, C., & Goodwin, A.(2016). Reform efforts in teacher education. Loughran, J. & Hamilton M. L.(eds)
(2016). *International handbook of teacher education*. vol. 1. Springer. pp. 294-302.



| 시론 |

중등교원 양성체제의 변화 방향

김 병 찬 | 경희대학교 / 교육학과 교수

1.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에서 중등교원 양성의 경우,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교원수급의 불균형 상태, 직접적으로는 교사 자원의 과잉 공급 상태에 있었으며, 교원수급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와 논란이 있어 왔고, 교사양성정책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책 변화나 논의들이 지나치게 교원의 수급 균형, 양성인원의 조절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교육부, 2021; 윤정일, 2002; 이윤식 외, 1994; 정영수, 2002). 하지만 교원수급과 관련한 실질적인 변화나 진전은 없이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교사의 질에 대한 불만도 커져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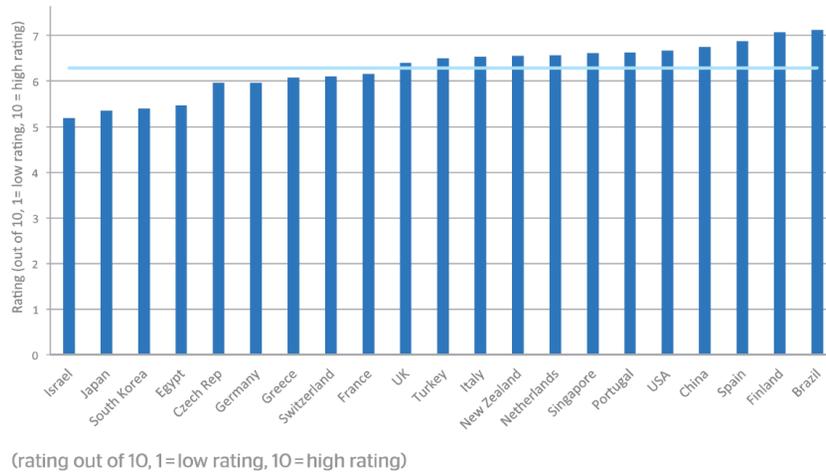
교원양성교육에 있어서 교원수급, 양성인원의 조절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바로 교원양성교육의 질의 문제이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교사양성에 있어 양성인원을 많게 할 것이냐, 적게 할 것이냐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교사양성 인원이 많은 적든 교원양성교육의 핵심은 그 교육의 질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정작 중요한 교원양성교육의 질에 관한 논의나 대안이 부족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교원양성 교육의 질 관련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교원양성체제 교육과정은 이론중심적인 성향이 강하고, 학교현장과의 연계가 미흡하며, 교육과정 내에서의 체계성과 연계성이 약하고, 교육과정의 내용 전문성이 부족하며, 교직의식이나 교육관 등 정의적 측면 함양을 위한 과정이 미흡하다는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강환국, 1995; 김기수, 2013; 박재승, 2005; 신현석, 2009; 정미경 외, 2014; 정진곤, 1991).

또한, 교원양성체제 구성원들에 관한 연구를 보면(김갑성 외, 2017; 김병찬, 2008; 정미경 외, 2014) 현 교원양성기관들은 ‘어떤 교사가 되는가보다 ‘어떻게 교사가 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학생들 스스로 교사 정체성에 대한 큰 고민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사가 되어간다. 또한, 교원양성체제의 교수들은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부족하고, 순수학문 쪽에 보다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범대 구성원들의 특징은 결국 지식과 이론 중심 교육, ‘연계성이 부족한 교육구조’, ‘실제 현장과의 괴리’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

여러 연구들은 우리나라 교사들은 교원양성기관에서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학교 현장의 교사가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치열한 경쟁을 거쳐 교사가 되고 있지만, 치열한 경쟁은 수요-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에 따른 경쟁이지 교사의 질이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경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입직 경쟁은 치열하지만 그 높은 수준의 경쟁률이 교사로서의 우수한 질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사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는데, Varkey GEMS재단(2013)에서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얼마나 신뢰하

는지에 대한 ‘교사 가르침(teaching) 신뢰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세계 주요 국가 21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19위를 차지했다.



〔그림 2〕 교사가 잘 가르치고 있다고 신뢰하는 정도

※ 출처: Varkey Gems Foundation (2013). 2013 Global Teacher Status Index. p. 16.

2. 중등교원 양성체제의 변화 방향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중등교원 양성체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총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부분적, 지역적 개선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누더기 옷에 아무리 좋은 옷감을 가지고 덧대더라도 여전히 누더기 옷이며, 오히려 좋은 옷감마저 망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원양성체제는 어느 한 부분을 고쳐 쓸 수 없는 총체적인 문제 상황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굴러가고 있는 것은 형식적 정당화 기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 교원양성과정에서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며, 어떤 교사들이 양성되고 있는지 등의 그 내용이나 질에 대한 관심과 평가보다 국가가 정한 규정을 지키고 국가가 정해 준 인력을 차질 없이 양성해 내고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구체적인 예들이 교원자격검정기준, 교원양성 이수 학점, 교원양성기관평가 등이다. 그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배웠는지에 상관없이 국가에서 정해 준 학점을 이수하고 과정을 거치면 교원자격증이 수여되고, 교원양성기관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며,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지에 상관없이 교원양성기관평가에서 A등급을 받으면 교원양성에 문제없는 대학으로, 오히려 우수한 대학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 국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관리, 강화되면서 마치 교원양성기관들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합리성(형식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적 정당성 기제가 강화되면 내용적 정당성 확보에 상관없이 그 조직이나 기관은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다. 국가가 계속해서 교원양성 규정과 기준을 만들고 수정해 가며, 교원양성기관평가를 계속해 가는 한 우리나라 교원양성기관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교원양성체제는 형식적 정당화 접근을 뛰어넘어 내용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내용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는 정말 질적으로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 학교와 국가에 필요한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가? 등의 질문을 바탕으로 기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교원양성체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원격교육

우리나라 중등교원 양성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이론중심 성향이 매우 강하는 것이다(김병찬 외, 2018; 정미경 외, 2014). 교원양성기관 각 학과의 교육목표 차원에서 보면, 교사로서의 소양 함양뿐만 아니라 순수학문 지식 함양에도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공 교육과정 구성에서도 교과교육학보다는 교과내용학 과목들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과내용학 과목은 거의 대부분이 해당 학문 분야의 이론을 가르치는 과목들이다. 졸업 이수 학점 면에서 보면, 전체 졸업 이수 학점 중에서 전공과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 비해, 교직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직과목은 전체 졸업 이수 학점의 14.17% 정도를 차지하여 교원양성 과정에서 교직 준비보다는 교과내용학에 크게 치중되어 있음을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교직과목 내에서도 주로 이론을 다루는 교직이론 과목의 비중이 12학점 이상으로 전체 교직과목 이수 학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교사양성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이론중심 성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교원양성기관을 졸업하고 현직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교원들은 교원양성기관에서의 교육 경험에 대해 대체로 ‘이론중심적이며’, ‘빈약한 수준’이었다는 등의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김병찬, 2008; 박영숙, 2017). 현행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불만과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갈 것이다. 이제 교원양성 교육과정에서 이론중심적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벗어나서 실천중심 패러다임으로 혁명적 전환을 해야 한다. 교과내용학이 아니라 교과교육학을 중심축으로 하는 중등교원양성체제 교육과정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학 이론중심의 교직과목들도 실질적인 교사를 위한 준비과목들로(learning for teaching) 바뀌어야 하며 현장실습과 긴밀하게 연계되는 종합적인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나. 교원양성 교육 기간의 확대

사회의 변화 및 지식의 증가에 따라 교원들에게 더 많은 능력과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4년 과정의 교원양성교육으로는 이러한 변화와 요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이돈희 외, 1998). 따라서 새롭게 요구되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원양성 교육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다.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도 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교원양성 기간의 확대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교사양성 교육 기간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게 된다면 꼭 비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은 기존의 난립되어 있는 교원양성 과정을 통합, 정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김태완 외, 2008)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교육 기간의 확대는 현실적으로도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교원양성 과정에서 총 이수학점은 제한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 새로운 과목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이다. 새로운 필요에 의한 과목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총 이수학점은 한정되어 있는데 새로운 과목의 추가는 교사양성 기본과목들의 축소 및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현행 교원양성체제로는 교육현장의 필요와 변화를 모두 담아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교원양성 교육 기간의 확대를 위한 보다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교원양성 과정에서 학교 현장과의 연계성은 매우 중요한데,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은 학교 현장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이 될 수 있다(정일화, 천세영, 2017). 학교 현장에서 선택과목 및 심화과목, 통합과목 운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원들에게는 심화된 전문성이 필요한데, 대학원 수준에서의 교원양성은 이러한 현장의 필요를 채워 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대학원 수준에서 좀 더 폭 넓고 심화된 교육을 받은 교원은 미래 사회의 변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가 예견되고 있는데(Schwab, 2016),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교원들은 좀 더 철저한 전문성과 지식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현행 교원양성 교육 기간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교원양성 교육 기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관료주의 통제에서 전문주의 책무성 체제로의 변화

한국의 교원양성체제는 내적 기반이 허약할 뿐만 아니라 외적 환경도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다. 특히 교원양성교육에 대한 국가주도, 국가통제가 지속되면서 교원교육의 본질을 상실해 가고 있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교원양성교육은 제도와 법규,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국가주도의 체제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한국의 교원양성교육은 ‘내적 정당성’ 보다는 ‘외적 정당성’에 의해 주도되는 면이 있다. 즉 교원교육기관이나 담당자들이 교원교육의 핵심과 본질을 바탕으로 교원교육을 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제도나 법규의 규정을 맞추는데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좀 더 과감히 표현하면, 기능주의적, 관료적 틀에 갇혀 안주하면서, 교원교육의 형식적 정당성만 갖추려하고 교원교육의 내용적 정당성에는 무감각해져 버린 듯하다. 더욱이 교원양성기관평가 등으로 인해 양성인원 조정 등 비본질적인 측면에 관심과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예비교사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와 같은 본질적인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원양성 과정에서 시급히 국가통제, 관료주의에서 벗어나 전문주의 책무성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각 교원양성기관들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마음껏 질 높은 교원을 양성해 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가 세세하게 통제, 관리하여 교원을 양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수한 교사를 양성해 낼 수 있다. 국가의 할 일은 이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문가들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해 주는 일이다. 국가가, 관료들이 직접 교원을 양성할 수는 없다. 국가는 어디까지나 교원양성기관, 교원양성기관의 담당자들을 통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국가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질 높은 교원양성을 위해 이 길이 가장 바른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다.

3. 맺음말

우리나라 교원양성체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구조와 내용으로는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공감대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공감대가 이루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실제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가? 두 가지 정도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기존의 교원양성기관들의 이해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의 정책적 의

지 부족이다.

교원양성체제 개편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에 가보면, 대부분 각 교원양성기관의 대표나 담당자들이 함께 논의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자신들의 기관 이익을 혹은 기득권을 조금도 침해당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내거나 오히려 개편 과정을 통해 자신들 기관의 이익을 더 증진시키려는 방향으로 강하게 주장을 한다.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기관의 이익에 침해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그동안 모습이다. 그리하여 국가의 미래와 교육의 미래를 위한 협력하여 선을 이루려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역대 정부나 정권은 예외 없이 교원양성체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 복잡한 문제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임해진다. 이로 인해 교원양성체제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적인 것들에만 관여하면서 형식적 정당성만 확보, 유지해 온 것이다. 교원양성기관평가도 그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이다. 교원양성기관평가를 통해 교원양성교육의 질이 높아졌다고 인정하는 대학이 얼마나 될까?

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 최고의 자원이 교원양성기관으로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교육받고 교직으로 들어 온 교사들의 효능감이나 신뢰도는 중위권에도 미치지 못하는 객관적인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교원양성체제 개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적인 수준에 그치지 말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걸림돌이었던 각 교원양성기관들의 자기중심적 이해관계도 이제는 극복되어야 한다. 이해관계에 발목 잡혀 교육의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교원양성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목표와 큰 그림을 그려내고 각 교원양성기관과 이해당사자들의 협의와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정부 또한 골치 아픈 문제라고 해서 더 이상 미뤄두지 말고 적극 정책 의제화 해야 한다. 교원의 수급불균형 해소같은 지역적인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교사교육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참고문헌

- 강한국(1995). 교사교육론. 서울: 교학연구사.
- 교육부(2021).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시안). 세종: 교육부.
- 김갑성·박영숙·정광희·김기수·김재춘·김병찬(2009). 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기수(2013). 교원양성기관평가의 현황, 쟁점, 발전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김병찬(2008). 사범대학 교육 경험의 의미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5(2), 105-137.
- 김병찬, 김갑성, 박상완, 송경오, 이기영(2018). 교원 양성 및 임용 체제 개편 방안,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정책 보고서.
- 김태완, 최원희, 고대혁, 박선형, 박인심(2008). 교원 양성 및 임용의 다양화 방안 연구. 교육부.
- 박영숙(2017). 미래 지향적 교원 양성 방향에 관한 토론. 국회 교육희망포럼, EduNext2 미래 한국을 위한 교원 양성 방향(73-82). 국회 교육희망 포럼 자료집.
- 박재승(2005). 중등교원 양성 교육과정의 진단과 발전방향: 인문/사회분야 중심.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진단과 발전방향. 한국교원교육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자료집. 71-92.
- 신현석(2009). 교원양성체제의 개편 방향과 전략의 탐색. 한국교육, 36(3), 53-78.
- 윤정일(2002). 교육의 질 향상과 교사양성체제의 발전방향. 교육의 질 향상과 교사양성체제의 발전방향. 한국교원교육학회 제36차 춘계학술대회자료집. 7-27.
- 이돈희, 김남두, 최충옥, 박덕규, 박인심(1998). 대학원 수준에 있어서의 교원양성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이윤식 외(1994). 교사양성체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94-18.
- 정미경·김이경·김병찬·박상완·전제상(2014). 창의적 학습생태계를 위한 교직원 고성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82-100.
- 정영수(2002). “중등교사 양성체제”. 교육의 질 향상과 교사양성 체제의 발전 방향. 한국교원교육학회 제36차 춘계 학술세미나자료집. 91-109.
- 정일화, 천세영(2017). 교육전문대학원 교원양성체제의 탐색. 한국교원교육연구, 34(1), 149-173.
- 정진근(1991). 현행 사범대학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대교육논총, 4집 65-82.
- Schwab, K.(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lony/Geneva: World Economic Forum.
- Varkey Gems Foundation (2013). 2013 Global Teacher Status Index.



| 시론 |

교원양성체제, ‘실습학기제’로부터

최진욱 | 단재교육연수원 / 교육연구사

1. 교육부의 시동 걸기

교원양성체제개편에 대한 오랜 담론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숙의과정까지 진행했다. 최근에는 교육부가 만든 시안에 대한 공청 단계까지 진행했다. 교육부의 일정대로라면 10월 중 방안을 발표하게 되어 있다. 필자는 이 시안 중에서 실습학기제'를 중심으로 교원양성체제 개선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교원양성체제 개선 정책의 범위는 대입에서부터 임용까지이다. 교사상에 대한 재정립과 문민정부 때부터 시작해 논의의 주를 이루었던 전문대학원 도입도 핵심 과제이다. 국가교육회의의 숙의과정에 함께했던 교육부는 숙의 위원들 간에 일정 부분 동의가 된 교사상을 정리하여 담았다. 합의가 어려웠던 부분인 전문대학원 도입은 장기적 과제로 보는 듯하다. 전문대학원 도입과 연동이 될 대입전형에 대해서는 다루기 어려웠을 것이고, 임용 부분은 교육청의 역할로 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안들은 현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체로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용과 함께 교육 현장에 투입된 교사는 현장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체계화된 처방을 즉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교수 방식의 변화, 학생-학부모들과의 관계 변화, 업무 시스템의 변화, 확대되는 교육 현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초임 교사도 제대로 응대를 해야 한다. 의사가 환자의 처방에 머뭇거리지 않도록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통해 끊임없는 실습을 하듯 교사 양성에 교육실습이 중요하다. 임용체제의 개선에 중심이 될 시안이 바로 교육실습 학기제이다.

2. 실습학기제

실습은 ‘현장성’ 과 ‘전문성’ 을 담보한다. 우리나라의 예비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는 선배 교사들의 노하우를 제대로 전수받지 않고 임용되어 왔다. 고작 한 달짜리 실습은 말 그대로 체험학습 수준이다. 1년도 부족하지만, 최소한 학기제로 운영되어야 할 이유이다. 교육부의 안에도 실습학기 방안이 담겨 있었고, 교직 과목 학점과 연계했다. 부족한 학점은 주에 하루나 이틀 정도 실습교로 가지 않고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표1 참고)

5)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대한 법률』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총정원’, ‘교원 1인당 학생수(교원 1인당 학생수 15인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 운영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및 장학금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양성대학도 이런 정도의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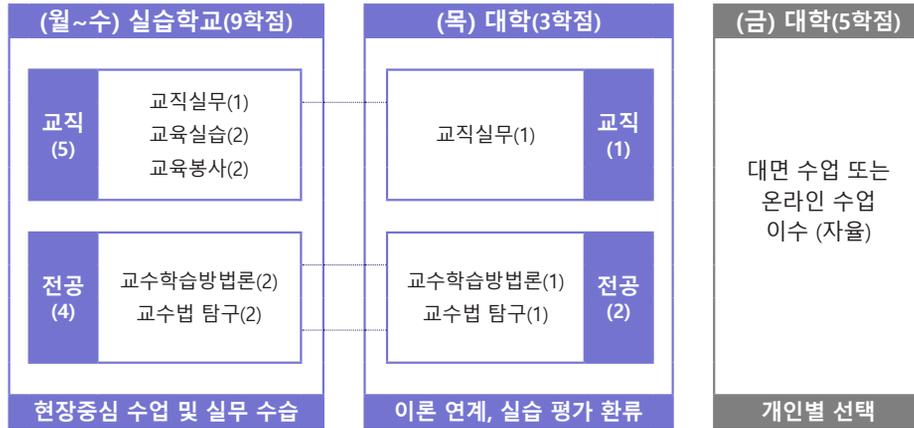


표 - 교육부, 2차 혁신위 반영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시안) (2021)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려면, 3·4학년 4학기 중 어느 한 학기를 선택해 실습학기를 이수한다. 실습학기 동안 이수해야 할 학점은 한 학기에 이수해야 할 평균 학점 정도로 설계되어야 한다. 대학의 교직 과목 교육과정과도 연계하여 실습교에서의 실습 상황을 학과 수업 속에서 공유하고 담당 교수에게 보다 전문적인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면에서 교육부의 설계는 적절하다.

다만, 실습생은 실습 시 실습학교 생활에 몰입해야 한다. 학기 준비 과정에서부터 정리(평가) 과정까지 방학을 포함해 오롯이 학교 생활을 체험해야 한다. 학습 연계에 있어서도 특정 요일만 있는 학급도 있기에 하루나 이틀씩 학교를 비우는 것은 온전한 실습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된다. 하루 하루 변화하는 학생들과의 관계맺기에 소외가 일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방학의 경험도 매우 중요하다. 방학 중에 일어나는 사소한 업무까지 선배교사의 노하우를 제대로 전수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실습 때 흘린 땀은 분명 교사되기의 밑거름이 된다. 실습과 연계된 학과 수업은 실습 일과 중에 온라인으로 수강한다. 온라인 수업이 일상이 된 요즘에 그 정도의 수업은 가능하다고 본다. 실습학점 12학점 외에 부족한 학점 따기는 타 학기 때 한 강좌씩 더 하거나, 야간 및 주말 온라인 강좌를 통해 이수할 수 있도록 권장할 사안이다. 현재의 체제(4년)를 흔들지 않고도 작동 가능한 방안이다.

3. 실습학기 중 인·적성 검사 실시

실습학기 중에 인적성검사를 실시하여 현장 교사들에 의해 한 번 더 거르는 장치도 필요하다. 교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거나며 불벤소리를 하지만, 검사지를 통해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그나마, 재기회까지 주는 지금의 장치는 실효성이 약하다. 한 학기 동안 실습생을 관찰한 학교와 지도교사들이 최종적으로 인·적성 평가를 한다. 선배 교사들의 책임이다.

체제와 절차상 양성기관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되, 실습 기간 중 학교가 실습생을 다각도로 관찰한 종합 평가서를 작성한다. 이를 교육청이 수합하여 부적격 소견이 있으면, 인사 담당이 실사를 하고 교육감 결재를 득해 양성기관으로 제출한다. 책임을 분산하고 최종 책임의 무게를 덜기 위한 장치이다.

4. 실습학기제 운영 매뉴얼

교육부 시안에는 2022학년도부터 실습학기제 시범실시를 하려 한다. 개선안 확정과 함께 운영 매뉴얼 작업 필요하다. 전문가 집단들로만 구성해 단기간에 만들기 보다 교육감이 추천한 교육청 전문가는 물론, 예비교사들과 교수들도 포함된 제법 큰 그룹으로 구성해 작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감이 추천하는 전문가는 실습학기 준비를 위한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한 업무 연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좋겠다. 실습생-멘토교사 매칭이나 임용시험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매뉴얼에는 형식적 절차나 규정 안내는 물론, 선배 교사들의 노하우도 담아야 하기에 작업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5. 교육청의 몫

현재 초등의 경우에는 실습 연구학교가 지정되고, 교육청이 매칭을 시켜준다. 중등은 대부분 실습생들이 알아서 학교를 찾고 있다. 실습학기제 전면화를 앞두고, 양성 규모의 적정화가 전제가 되어야겠지만, 실습교 매칭 몫은 교육청이다. 학교를 대상으로 하지 말고⁶⁾, 멘토 교사를 찾아야 한다. 수석교사 활용도 좋지만, 예비교사와 멘토가 되어 수업과 생활, 진로 교육을 하고자 하는 교과 및 담임 교사를 찾고 이들을 연수를 통해 체계화해야 한다. 매뉴얼이 확정되면 현장 멘토교사 발굴과 연수가 바로 진행되어야 한다. 양성의 몫으로 교육청이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인·적성 검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교육청의 몫이다. 실습 기간 중의 활동을 임용과 연계하는 것 역시 교육청의 몫이다. 실습 활동을 포트폴리오를 제작해 두었다가 임용 2차 시험에서 면접이나 발표자료로 활용해 심사하는 방안도 제안해 본다. 그러기에 교육청의 임용 담당이 보강될 필요도 있다.

6. 멀지만 가야할 길, '교원전문대학원'

교원양성 교육프로그램의 질 문제와 교원 수요와 공급의 문제는 20년 전이나 현재나 변함없이 제기되고 있다.(진동섭(2004)) 양성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양성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이 '교원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것이다. 교육 선진국으로 가는 멀지만 가야할 길이다.

2원화된 체제로 가도 좋겠다. 지금의 교·사대를 두고 대학원에 진학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석사 학위도 주어 교사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학부 때 1전공(예:초등)을 하고, 대학원에서 2전공(예:중등-교과)을 하여 급간-교과간 복수전공(실습 2회)을 지니게 해 미래학교 운영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 대학원 진학이 강제되는 만큼 학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7. 논의는 충분하고, 전면 시행 때까지 준비도 충분하다

양성체제 개선에 기초가 되는 것은 규모의 적정화이다. 전면화를 위한 전제다. 특히 지금까지의 중등 교원 양성은 국가적 망기였다. 미래로 가는 현재에 망설이면 미래는 또다른 과거가 될 수밖에 없다. 한 달짜리 학교체험 활동은 실습생

6) 충북의 경우, 유초중고 800여 개교 중 2021년 실습학교는 92개교였다. 교대생 2-3학년 실습생까지 합치면 한 학교에 많게는 6-70 명이 배당되기도 했다. 이는 실습생과 학생과의 호흡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최진욱, 2021, 교육부 1차 토론 원고)

이나 대학, 실습교, 교육청 모두에게 의미가 없었던 과거였다. 한 학기 교육실습으로 올곧게 거듭나야 한다. 미래의 길로 가야 한다.

교육 현장과 교사들, 그리고 교육청은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실습을 통해 제대로 경험을 쌓은 초임 교사가 들어오기를 현장 교사들이 요구하고 있다. 현장의 요구는 뜨겁다. 예비교사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있는 선배 교사들을 발굴하고 연구하고 연수하며 준비해야 할 때다. 학계에서도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팔을 걷어 붙여할 사안이다.

참고문헌

- 김갑성(2021). 교원양성체제 개편 관련 연구 동향 검토, *교원교육*, 37:1, 49-67
- 김병찬(2019). 2019 한국교원교육학회 제75차 춘계 학술대회. 2030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 - 교육전문대학원 설립을 중심으로
- 국가교육회의(2020). 「미래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 속의 참고자료
- 교육부(2021). 2차 혁신위 반영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시안)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2020).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안(교원양성체제 개편 정책위원회)

• 2021년 학회주요소식 •

1. 제 49대 사무국 소개

한국교육행정학회		홈페이지: http://www.keas.or.kr E-Mail: keas1967@dam.net
학회	주소	(0415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마스터즈타워빌딩) 9층 902호
사무국장	성명	이호준(청주교육대학교, eduforall0116@gmail.com)
간사	성명	총무간사: 장우천(충북대학교) -업무: 학회 및 학술대회 총괄업무 - keas1967@daum.net , 010-7522-8217
		총무부간사: 김용준(충북대학교) -업무: 회원 및 회비 납부관리, 홈페이지 관리 관련 업무 - keas1967@daum.net , 010-2430-1532
		편집간사: 김범주(경인교육대학교) -업무: 교육행정학연구 투고 및 발간 관련 업무 - keas1967@nate.com , 010-8593-8900
		편집부간사: 김보경(경인교육대학교) -업무: 교육행정학 연구 투고 및 발간 업무 지원, 게재료 납부 확인 - keas1967@nate.com , 010-5573-8661

2. 누리미디어와의 학술DB서비스 신규 계약 체결

지난 9월 10일, 학술DB서비스 분야의 국내 최대업체인 누리미디어와 학술DB서비스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계약은 교보스콜라와 체결했던 이전 계약이 올해 10월 28일 종료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계약기간은 2021년 10월 29일부터 5년이 되는 2026년 10월 28일까지입니다. 학회는 이번 계약을 통해 연간 1,980만원, 5년 동안 9,900만원의 저작권료 수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누리미디어로부터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과 신규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현재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과 신규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향후 최상의 상태로 회원님들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아래의 표는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의 서비스 내용을 정리한 표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교보스콜라 (기존 업체)	누리미디어 (신규 업체)
저작권료 수입	601만원(2021년 기준)	최소 1,980만원(2022년 이후)
저작권료 요율	30%	30%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구축	미제공	무상 지원
학회홈페이지 구축	미제공	무상 지원

3. 부회장 선거 안내

오는 11월에는 제50대 부회장(제51대 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부회장선출위원회에서는 「교육행정학회 회칙」 제15조에 의거하여 이사의 추천을 받아 두 명의 부회장 후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50대 부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회비 납부와 회원 정보 업데이트에 대해 안내를 드립니다. 한국교육행정학회는 「교육행정학회 회칙」 제15조 6항에 의거, 부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온라인(전자)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선거 참여 자격은 「교육행정학회 회칙」 제15조 1항에 따라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2년 연속(2020년, 2021년) 연회비를 납부하여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회원에게 부여됩니다. 이에 10월 29일(금)까지 연회비(일반 정회원의 경우 50,000원, 우리은행 1005-003-391182, 예금주: 한국교육행정학회)를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부회장 선거에 관한 주요 일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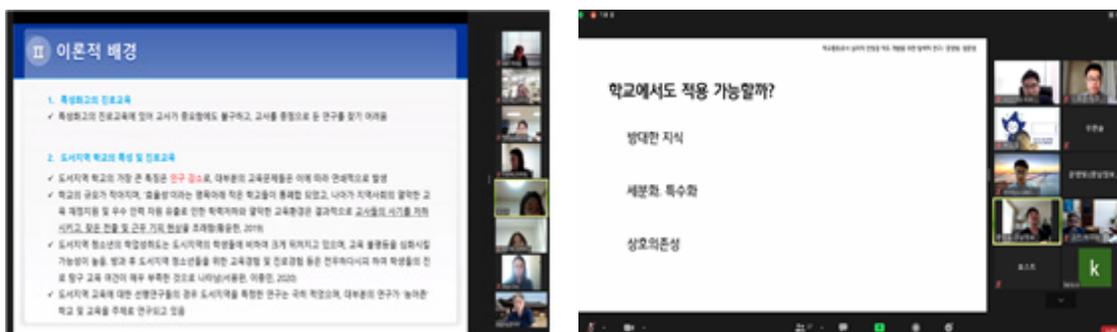
순서	항목	내용	일정	비고
1	부회장 후보 추천권자 확인	- 부회장 후보 추천권자 확인 및 공유	10. 6.(수)	사무국
2	부회장 후보 추천 의뢰	- 당연직 이사 및 최근 3년간의 선임직 이사 대상으로 후보자 2인 추천 요청 - 온라인으로 후보 추천 진행	10. 14.(목) ~ 19.(화)	사무국
3	후보 선정 및 수락	- 개표 및 다득표자 3인 후보 선정 - 순위명부 작성 - 다득표자에게 후보 수락 여부 확인	10. 20.(수)	위원회 주관 온라인 회의 (사무국 지원)
4	선거자료 요청 및 작성	- 후보 수락자 선거자료(후보수락 동의서, 선거자료 양식 등) 제출 요청 - 선거자료 수합 및 최종 확인: 10. 29.(금)	10. 21.(목) ~ 27.(수)	사무국
5	선거인명부 작성	- 2021년 기준, 2020년 및 2021년 2년간 연회비 납부자 명단 작성 및 공유	10. 29.(금)	사무국
6	부회장 투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선거 시스템을 활용한 투표 진행	11. 11.(목) ~ 12.(금)	사무국
7	개표 및 선거 결과 공고	- 개표일: 11. 13. - 결과 통지: 11. 13. 개표 즉시 - 결과 공지: 11. 13. 홈페이지 공지	11. 13.(토)	위원회 주관 온라인 회의 (사무국 지원)

※ 추후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학회 행사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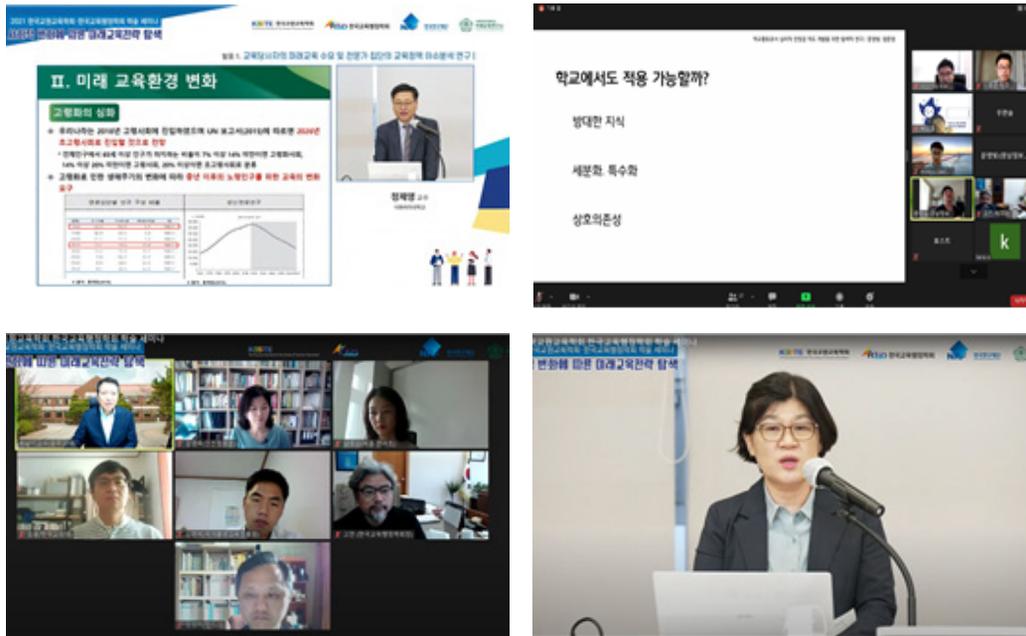
1) 2021년 하계 학술대회(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분과학회 세션 운영)

- 가. 주제: 한국,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교육
- 나. 일시: 2021년 6월 26일(토) 10:00~17:10
- 다. 장소: 온라인 ZOOM 회의실
- 라. 주최: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 마. 프로그램: 11개 발표 세션(자유주제 발표 세션 8개, 신진학자지원위원회 발표 세션 3개)에서 총 36개 발표 진행



2) 2021년 한국교원교육학회·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 세미나

- 가. 주제: 사회적 변화에 따른 미래교육전략 탐색
- 나. 일시: 2021년 8월 28일(토) 14:00~17:00
- 다. 장소: 이화여대 교육관 B151호 / 온라인 학술세미나 진행
- 라. 주최: 한국교원교육학회·한국교육행정학회
- 마. 프로그램: 2개 주제발표
 - 발표1: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의 방향(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 발표2: 모든 아동을 위한 사회적돌봄체계 구축(김민희, 대구대 교수; 김성기, 협성대 교수;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3) 한국교육행정학회-일본교육행정학회 국제 심포지움 개최

가. 주제: Responses to the Covid-19 Crisis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What lessons can we learn?

나. 일시: 2021년 10월 9일(토) 13:00~17:00

다. 장소: 온라인 웨비나

라. 주최: 일본교육행정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마. 프로그램: 4개 사례 발표

- 발표1: New Zealand's response to COVID-19 (Iona Holsted, 뉴질랜드 교육부)
- 발표2: Deep democracy within wider communities: lessons learned in Korean education from the COVID-19 crisis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 발표3: Perceptions of Covid-19 policy in Education (Duncan Baldwin, 영국 케슬락 학교)
- 발표4: What the COVID-19 PANDEMIC Visualized and Brought About? (와타나베 케이코, 일본교육정책연구소 교육 정책·평가연구부장)



4) 2021년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 안내

- 가. 주제: 지방교육자치 30년: 평가와 전망
- 나. 일시: 2021년 11월 27일 (토) 9:30 ~ 18:00
- 다. 장소: (주제발표)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 아라컨벤션홀
(자유주제 및 분과위원회 발표) 온라인 ZOOM 회의실
- 라. 주최: 한국교육행정학회
- 마. 프로그램: 자유주제발표 3개 세션, 분과위원회 자유발표 4개 세션 등 7개 발표 세션, 1개 기관세션 운영, 5개 주제발표 진행 예정

일정		발표 및 내용	비고
1부 자유주제발표	9:00 ~ 9:30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링크 ①~④ ■ 동시간 대 네 개 세션 운영
	9:30 ~ 10:50	① 학교행정 분야 자유주제발표 사회자: 홍창남 (부산대 교수)	
		② 대학행정 분야 자유주제발표 사회자: 백정하 (대학교육협의회)	
		③ 교육정책 분야 자유주제발표 사회자: 김민희 (대구대 교수)	
	④ 기관세션: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사회자: 이정미 (충북대학교 교수)		
10:50 ~ 11:00		휴식 시간	

2부 분과위원회 자유발표	11:00 ~ 12:30	① 연구방법론위원회 사회자: 송경오 (조선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링크 ①~④ ■ 동시간 대 네 개 세션 운영
		② 미래학교연구위원회 사회자: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③ 신진학자지원위원회1 사회자: 엄문영(서울대 교수)	
		④ 신진학자지원위원회2 사회자: 정수현(서울교대 교수)	
12:00~13:00		점심시간 및 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링크 ⑤
3부 연차학술대회 주제 발표	13:10 ~ 13:40	개회사 고 전 (본 학회 회장, 제주대학교 부총장) 환영사 제주대학교 총장 축사1 제주도의회 의장 기조강연: 김성열 (경남대 교수, 본회 제43대 학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이호준(사무국장, 청주교대 교수) ■ 온라인 링크①
	13:40 ~ 14:20	주제1: 지방교육자치제의 제도사적 평가 발표자: 김병주 (영남대 교수) 토론자: 박수정 (충남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김이경(중앙대 교수) ■ 온라인 링크① ■ 토론자는 비대면 참가
	14:20 ~ 15:00	주제2: 지방교육자치제의 목적 달성의 평가 발표자: 나민주 (충북대 교수) 토론자: 황준성 (KEDI 선임연구원)	
	15:00 ~ 15:40	주제3: 교육감제도의 평가 발표자: 김규태 (계명대 교수) 토론자: 김왕준 (경인교대 교수)	
	15:40 ~ 15:50	휴식 시간	
	15:50 ~ 16:30	주제4: 교육위원회제도 및 교육의원제도 평가 발표자: 김 용 (한국교원대 교수) 토론자: 박호근 (한국체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박상완(부산교대 교수)
	16:30 ~ 17:10	주제5: 지방교육자치와 학교자치의 관계 분석 및 평가 발표자: 김민조 (청주교대 교수) 토론자: 이인희 (제주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링크①
	17:10 ~ 17:40	종합토론 좌 장: 박선형 (동국대, 본학회 부회장) 토론자: 전세상 (공주교대, 한국교원교육학회장) 하봉운 (경기대, 한국재정경제학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링크①
4부 총회	17:40 ~ 18:00	(사) 한국교육행정학회 총회 소석논문상, 주삼환교육리더십상 시상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이호준(사무국장, 청주교대 교수) ■ 온라인 링크①

5. 회원 소식

임연기 공주대 명예교수(전 39대 학회장) 저서,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임연기 저(공주대 명예교수)



2021년 2월 25일 출간 | 학지사

한국교육행정학회 39대 학회장이셨던 임연기 공주대 명예교수님께서 올해 출간하신 ‘딜레마와 교육정책’이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었습니다. 교육부와 대한민국학술원은 기초학문 분야의 연구·저술 활동의 활성화하고자 매년 우수학술도서를 선정해 전국의 대학 도서관 등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임연기 명예교수님께서서는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으셨습니다. 이번 저서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난 3년간 저술편찬공모사업의 지원을 받아 출간되었습니다. 딜레마 이론의 관점에서 농촌학교 정책 현상을 새롭게 조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6. 2021년 회원 신간 안내

1) 코로나 이후의 교육을 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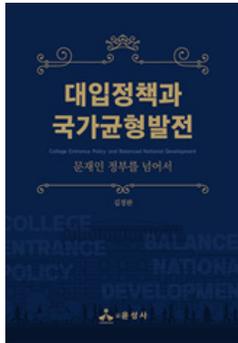
김용 교원대 교수 외(곽덕주, 김민성, 이승은) 공저 | 지식의날개 | 2021년 6월 30일 출간



공상과학영화에서나 그려지던 미래교육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곁으로 찾아왔다.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화상으로 수업을 듣고, 온라인으로 과제를 제출하면 곧바로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는다. 친구들과는 언제든지 화상으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눈다. 디지털 매체가 중심이 되어 사람과 사람이 접촉할 일은 많지 않아 보이는 예정된 미래. 코로나19로 우리는 미래교육을, 디지털 연결 사회로의 전환을 본의 아니게 미리 경험해 보아야 했다. 그런데 미리 겪어 본 미래교육은 정말 영화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름다웠을까. 교육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상상했던 미래교육에서 놓치고 있었던 것은 없었을까.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가운데 그럼에도 변화해야 할 것은 또 무엇일까. 이 책에서 저자들은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던진 정해진 숙제의 답을 찾는 길로 우리들을 안내한다.

2) 대입정책과 국가균형발전: 문재인정부를 넘어서

김정완 대진대 교수 저 | 윤성사 | 2021년 10월 15일 출간



동 저서는 교육학 울타리를 넘어 종합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현행 대입정책을 다루고 있다. 대입제도가 초중등교육을 좌우하는 현실에서 우리교육이 전인교육과 4차 산업교육이라는 교육적인 목적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사회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입제도와 고교학점제의 문제점, 부동산과 동과 대입정책의 관계 등 현행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함께 새로운 대입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3) 교사와 교사교육

박상완 부산교대 교수 저 / 박영story / 2021년 10월 18일 출간



"개인과 사회의 발전과 변화가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질 높은 교사와 교사교육, 그러한 교사를 있게 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어떠한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태어나든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적성, 소질, 잠재력 등)을 개발하고 다른 사람들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교수학습 여건을 만드는 것은 교사의 핵심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교사와 교사교육』은 이러한 가정 하에 교사와 교사교육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었다. 각 장은 학생의 삶, 가르치는 일에 열정과 소명을 가진 교사는 어떤 교사인가, 이러한 교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전문성은 무엇인가, 이러한 교사를 어떻게 교육하고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연결되어 있다." (저자 서문에서)

4) 오늘의 교육 내일의 교육정책

박수정, 김용, 엄문영, 이인희, 이희숙, 차성현, 한은정 교수 공저 / 학지사 / 2021년 10월 30일 출간 예정



이 책은 교육정책 이슈들을 선정하고, 그 내용을 소개하고, 생각할 만한 주제를 던져 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부 ‘학교와 교육의 변화’는 학교제도, 교육과정, 혁신학교, 교사 전문성을 다루고, 교육의 미래와 교육의 질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2부 ‘교육과 교육비’는 교육 재정,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사교육을 다루고, 교육에 있어서 ‘돈’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바람직한 쓰임새를 제시해 보았다. 3부 ‘학교교육 체제와 방향’은 유아교육, 고등학교 체제, 영재 교육, 대학입학정책을 다루고, 학교교육의 의미와 변화 방향을 논의하였다. 4부 ‘교육자치와 참여’는 학교자치, 학부모참여, 마을교육공동체를 다루었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자치와 참여 방식을 상상해 보도록 하였다.

7. 정책연구 수주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는 올해 10월까지 6개의 정책연구 과제를 수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회 회원님의 정책연구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학회기여금 (간접비)	발주기관
2021년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연구리포트	김두정(충남대)	2021.02.19. ~ 2021.04.30.	300,000원	국가교육회의
제주미래교육 비전 수립 연구 용역	김성기(협성대)	2021.02.19. ~ 2021.04.30.	2,733,545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대학원 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	박수정(충남대)	2021.04.16. ~ 2021.07.14.	1,000,000원	경기도교육청
대전의국어고 일반고 전환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 전문성 강화 방안 연구	박수정(충남대)	2021.04.20. ~ 2021.10.19.	1,000,000원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제화 지표 및 지수 개발 연구	백선희(경인교대)	2021.07.01. ~ 2021.10.31.	1,021,818원	교육부(APEC IACE)
제주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 연구	나민주(충북대)	2021.08.24 ~ 2022.01.05.	2,058,100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8. 2021년 회비납부 명단(2021년 10월 말 기준)

1) 2020년도 3개년 회비 납부자 명단(5명)

김은정, 김효정, 이한나, 정설미, 정희욱

2) 2020년도 5개년 회비 납부자 명단(4명)

구성우, 나민주, 엄문영, 허병기

3) 2021년 신입회원 회비 납부자 명단(70명)

강소윤, 강신철, 고미옥, 구미례, 국준봉, 권영성, 김경희, 김범주, 김보경, 김새론, 김영옥, 김용준, 김은혜, 류지은, 문지영, 민병성, 민자원, 박광선, 박동찬, 박성민, 박수아, 박시진, 박은정, 박정희, 박종열, 박현석, 배진희, 설가인, 손다운, 손관이, 신원규, 안성률, 안지혜, 은수진, 이고은, 이병도, 이서연, 이성이, 이성희, 이수지, 이승민, 이승연, 이승현, 이영선, 이원재, 이유경, 이태화, 이훈, 임혜진, 장민경, 장서진, 장석우, 장우천, 장유빈, 전주현, 정수영, 정재민, 조선미, 조성은, 조은주, 조지혜, 지혜영, 진형정, 최성규, 최수연, 최연우, 최지혜, 한지혜, 허정, 황영식

4) 2021년 기존회원 회비 납부자 명단(127명)

강민수, 강원근, 강은숙, 강제혁, 권순형, 권초아, 권희청, 김경희, 김나영, 김도기, 김민규, 김상규, 김성열, 김성천, 김승정, 김영식, 김유원, 김정아, 김정원, 김종규, 김지선, 김지연, 김지현, 김진희, 김현진, 김혜진, 김훈호, 김희성, 노지영, 문찬주, 민윤경, 박광선, 박균열, 박삼철, 박상민, 박세준, 박세진, 박영림, 박유민, 박정인, 박종필, 박주호, 박준현, 박태양, 박호근, 박효원, 백승주, 백정하, 변기용, 서시연, 서지영, 서지현, 서화정, 석재현, 선미숙, 선애경, 손성욱, 송경오, 송진주, 송효준, 신봉섭, 신상명, 신재영, 신정철, 신철균, 신하균, 신하영, 신현석, 심현기, 안영은, 양성훈, 양윤정, 염민호, 유동훈, 윤정, 윤기현, 윤예지, 윤혜원, 이기용, 이미희, 이민규, 이수정, 이승호, 이승희, 이영선, 이예슬, 이원재, 이은혜, 이인수, 이재선, 이주희, 이진권, 이창수, 이평구, 이호준, 임수진, 임희진, 장민경, 장혜원, 전수경, 정양순, 정영현, 정유리, 정은하, 정현주, 조미애, 조석훈, 조영하, 주휘정, 차지철, 채송화, 채윤정, 최미숙, 최상훈, 최예슬, 최원성, 최준렬, 하동엽, 한은정, 한은정, 허주, 홍미영, 홍지오, 황선필, 황윤한

5) 법인 이사회비 납부자 명단(2명)

윤정일, 고전

6) 이사회비 납부자 명단(37명)

김민조, 김민희, 김병주, 김병찬, 김왕준, 김용, 김이경, 김정희, 나민주, 박경호, 박상완, 박소영, 박수정, 박영숙, 박주형, 백정하, 송기창, 신계흠, 신정철, 엄문영, 엄준용, 오범호, 유길한, 이길재, 이석열, 이쌍철, 이인희, 이재덕, 임수진, 장덕호, 전제상, 정동욱, 정성수, 정재영, 주현준, 차성현, 하봉운, 허병기, 황준성

7) 2020년도 기관회원 납부(6)

경기도교육연구원, 남서울대학교도서관, 전주교육대학교 도서관,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한국사학진흥재단

※ 연회비 또는 이사회비를 납부하셨으나 납부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 학회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 담당: 김용준 부간사(010-2430-1532, keas1967@daum.net)

9. 제 49대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 임원

▣ 회장단

- 회 장 : 고전(제주대)
- 부 회 장 : 박선형(동국대)
- 감 사 : 염민호(전남대), 김갑성(한국교원대)

▣ 이사회

• 당연직 이사 32인

김영식, 신극범, 신철순, 김명환, 남정걸, 이형행, 윤정일, 신중식, 김신복, 주삼환, 이종재, 서정화, 노종희, 강무섭, 강인수, 박종렬, 정영수, 김명수, 신재철, 송광용, 임연기, 허병기, 이윤식, 박세훈, 김성열, 신현석, 주철안, 김혜숙, 반상진, 박남기, 고전, 박선형

• 선임직 이사 65인

고장완(성균관대) 김규태(계명대) 김도기(한국교원대) 김민조(청주교대) 김민희(대구대) 김병주(영남대) 김병찬(경희대) 김성기(협성대) 김왕준(경인교대) 김용(한국교원대) 김용련(한국외대) 김이경(중앙대) 김정희(대교협) 김희규(신라대) 나민주(충북대) 남수경(강원대) 박경호(KEDI) 박대권(명지대) 박상완(부산교대) 박소영(숙명여대) 박수정(충남대) 박영숙(KEDI석좌) 박종필(전주교대) 박주형(경인교대) 배상훈(성균관대) 백정하(대교협) 변기용(고려대) 송경오(조선대) 송기창(숙명여대) 신정철(서울대) 신재흡(한성대) 신철균(강원대) 안선희(중부대) 양성관(건국대) 엄문영(서울대) 엄준용(중부대) 오범호(서울교대) 유길한(전주교대) 윤홍주(춘천교대) 이길재(충북대) 이덕난(국회입법조사처) 이동엽(KEDI) 이석열(남서울대) 이수정(단국대) 이승호(KEDI) 이쌍철(KEDI) 이인희(제주대) 이재덕(한국교원대) 이정미(충북대) 이필남(홍익대) 임수진(광주여대) 장덕호(상명대) 전제상(공주교대) 정마울(서울교대) 정제영(이화여대) 정동욱(서울대) 정성수(대구교대) 정수현(서울교대) 주현준(대구교대) 차성현(전남대) 최정윤(KEDI) 하봉운(경기대) 한유경(이화여대) 홍창남(부산대) 황준성(KEDI)

▣ 분과위원회 구성

분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획·홍보 위원회	홍창남 (부산대)	이쌍철 (KEDI)	김용(한국교원대)	김용련(한국외대)	김한나(충신대)
			김혜영 (부산교육정책연구소)	안선희(중부대)	이덕난 (국회입법 조사처)
			이동엽(KEDI)	한은정(인천대)	
학술위원회	박상완 (부산교대)	김민조 (청주교대)	김도기(한국교원대)	김훈호(공주대)	변수연(부산외대)
			박소영(숙명여대)	이경호(고려대)	이길재(충북대)
			이인희(제주대)	이희숙(강남대)	
학회지 편집위원회	김왕준 (경인교대)	김민희 (대구대)	김혜진(KEDI)	박수정(충남대)	박종필(전주교대)
			송경오(조선대)	양성관(건국대)	이재덕(한국교원대)
			장덕호(상명대)	정바울(서울교대)	정성수(대구교대)
			함승환(한양대)	허주(KEDI)	
조직규정 위원회	김용 (한국교원대)	이덕난 (입법조사처)	고장완(성균관대)	김순남(신한대)	박대권(명지대)
			서재영(KEDI)	엄준용(중부대)	임수진(광주여대)
			전수빈(동국대)	주영효(경상대)	
재정기금 위원회	백정하 (대교협)	이석열 (남서울대)	서지영(대교협)	송효준(KEDI)	신동훈 (청소년정책연구원)
			신봉섭(나사렛대)	신재흠(한성대)	이수정(단국대)
			주현준(대구교대)	차성현(전남대)	
포럼운영 위원회	황준성(KEDI)	신경석 (평생교육원)	강호수(경북대)	김성기(협성대)	김종규(연세대)
			박효원(KEDI)	배영직 (서울교육연구정보원)	신정철(서울대)
			유경훈(KEDI)		
국제학술 위원회	정동욱 (서울대)	이필남 (홍익대)	김용(한국교원대)	김현준(미네소타대)	민윤경(KEDI)
			박주호(한양대)	변수용 (펜실베니아대)	이전이 (경기도교육연구원)
			정수연(큐슈여대)		
학술편찬 위원회	김병주 (영남대)	차성현 (전남대)	김병찬(경희대)	김용(한국교원대)	김이경(중앙대)
			박수정(충남대)	배상훈(성균관대)	변기용(고려대)
			윤홍주(춘천교대)	이병식(연세대)	정제영(이화여대)
정책연구 위원회	장덕호 (상명대)	김규태 (계명대)	김용기(경기도청)	박경호(KEDI)	박인심(서울여대)
			이승호(KEDI)	이정미(충북대)	차지철(동명대)
			최정윤(KEDI)		
연구방법론 위원회	송경오 (조선대)	신철균 (강원대)	김병찬(경희대)	박선형(동국대)	변기용(고려대)
			변수연(부산외대)	이성희(KEDI)	정바울(서울교대)

▣ 분과위원회 구성

미래학교 연구위원회	정제영 (이화여대)	박주형 (경인교대)	남미영(서울강술초)	노정서(신남중)	박준현(대구장기초)
			박희진(계명대)	신미숙 (미래교육연구소)	이기용(안동대)
			이남경 (광운전자공고)	장혜원(KAIST)	정예화 (미래교육연구소)
			최정원(만월중)		
신진학자 지원위원회	엄문영 (서울대)	이승호 (KEDI)	김영식(경남대)	김훈호(공주대)	오범호(서울교대)
			윤홍주(춘천교대)	임소현(KEDI)	최원석(경인교대)
부회장선출 관리위원회	김이경 (중앙대)	이인희 (제주대)	김기수 (경기교육연구원)	김달호(동아대)	남수경(강원대)
			박삼철(단국대)	이정기(백석대)	정수현(서울교대)
			채재은(가천대)		
윤리위원회	임연기 (공주대명예)	김정희 (대교협)	김홍주(세명대)	김희규(신라대)	나민주(충북대)
			노종희(한양대명예)	박영숙(KEDI석좌)	서정화(홍익대명예)
			이차영(한서대)	최준렬(공주대)	
소석논문상 위원회	주삼환 (충남대명예)	서정화 (홍익대명예)	강인수(수원대석좌)	김혜숙(연세대)	노종희(한양대명예)
			박세훈(전북대)	신중식(국민대명예)	이종재 (서울예대법인 이사장)
			임연기(공주대명예)		
주삼환 리더십상 위원회	김성렬 (경상대)	한유경 (이화여대)	김이경(중앙대)	박남기(광주교대)	박영숙(KEDI석좌)
			신봉섭(나사렛대)	신재흡(한성대)	신현석(고려대)
			주철안(부산대)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 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헌장은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 ① 회원은 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교육행정학과 한국교육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법률 및 학회 윤리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 학술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⑤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⑥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회원은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⑧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007. 4. 27



한국교육행정학회

